

공 개



의안번호	제 121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5. 18. (제 10 차)

의  
결  
사  
항

씨앤티85(주)[舊 (주)포스링크]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도 규 상
제출 연월일	2021. 5. 18.

## 1. 의결주문

씨앤티85(주)[舊 (주)포스링크]의 제20기(2015.1.1.~2015.12.31.)부터 제22기 3분기(2017.1.1.~2017.9.30.)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별지1, 별지2 및 별지3과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씨앤티85(주)[舊 (주)포스링크]의 제20기(2015.1.1.~2015.12.31.)부터 제22기 3분기(2017.1.1.~2017.9.30.)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발견된 위법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씨앤티85(주)[舊 (주)포스링크] 등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연결·별도 : '15년 1,484백만원]</li><li>○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개별 : '16년 및 '17년 1분기 850백만원, 연결·별도 : '17년 반기 및 3분기 850백만원]</li><li>○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개별 : '16년 674백만원]</li><li>○ 증권신고서 거짓기재</li><li>○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li></ul>
조치 내용 <small>*1,*2,*3,*4,*5</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증권발행제한 6월<sup>*6</sup></li><li>○ 과징금 [前 대표이사 000 10백만원]<sup>*7</sup></li><li>○ 과태료 [회사 37.5백만원]<sup>*8</sup></li><li>○ 감사인지정 2년<sup>*9</sup></li><li>○ 시정요구<sup>*10</sup></li></ul>

※ 前 담당임원 000('16.11.22. 퇴직)과 000('19.9.30. 퇴직)은 '해임권고' 대상이나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퇴직자위법사실 통지'로 갈음('사실의 통지'로서 개별 금융업법령상 임원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1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낮아,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을 적용

\*2 동기판단(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판단)

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고의

- “실재성이 없는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 표시하는 등 회계적 사실이나 기록을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고의’로 판단 [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1.가.1)]

나.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 고의

- “위법행위가 비자금 조성, 임직원등의 횡령·배임, 기타 불법자금세탁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의’로 판단 [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1.가.2)]

다.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 중과실

- “관련 법령, 감독기관 규정 또는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판단 [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가.1)]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 : 해당사항 없음

\*4 검찰통보

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OO지검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18.2.1.) 하였고, OOOO지검도 회사 前 대주주(OOO)의 횡령혐의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동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정식수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검찰통보’ 조치 생략

나.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 ①관련자가 동 횡령 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점, ②최대주주 및 경영진 교체 후 회생절차가 개시(‘20.5.11.) 되었다가 최근 회생절차가 종료(‘20.10.19.)된 점, ③‘19년 2월부터 횡령 등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 중인데, ‘검찰통보’로 다시 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투자자 보호관점에서 조치가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④증권발행제한 등 다른 조치로도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 ‘검찰통보’ 조치는 생략하고 업무정보를 송부

\* 횡령, 자본시장법 제147조(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및 제178조(부정거래 금지) 등 위반으로 000(前 대주주 겸 회장)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3억원, 000(前 이사)에게 징역 2년, 000(前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선고

※ **유사사례** : (주)0000('20.1.8. 증선위), (주)000('19.12.9. 증선위)에 대하여 위반 사항이 모두 해소된 상황에서 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투자자 보호관점**에서 조치가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다른 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통보'를 제외하고 업무정보를 송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5 조치근거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舊 외부감사법')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2항,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舊 외감규정')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제1항

\*6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20.9.1.)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 대신 '증권발행제한' 조치 부과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5.가.(3)]

\*7 조치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1항 및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8 조치근거 :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9 조치근거 : 「舊 외부감사법」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제1항, 「舊 외감규정」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제1항

\*10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지 않아 시정요구

○ 조치근거 : 「舊 외부감사법」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2항, 「舊 외감규정」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제1항

## 나.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 (1)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별도 : '15년 1,484백만원]
조치 내용 *1,*2,*3,*4	○ OO회계법인 [과실 IV] - 주 의  ○ 공인회계사 OOO [과실 IV] (제20기 담당이사, 주책임자겸 계정담당자) - 주 의

\*1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낮아, '현행 양정기준'을 적용

\*2 동기판단(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판단)

가.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과실

-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에 미달(2.87배)”하는 등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실’로 판단 [新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가. 및 나.]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 : 해당사항 없음

\*4 조치근거

- OO회계법인 : 「舊 외부감사법」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舊 외감규정」 제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 제1항
- 공인회계사 : 「舊 외부감사법」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舊 외감규정」 제54조(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제1항

## (2)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여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개별 : '16년 600백만원]</li> <li>○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개별 : '16년 674백만원]</li> </ul>
조치 내용 *1,*2,*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O회계법인 [과실 IV] - 주 의</li> <li>○ 공인회계사 OOO [과실 IV] (제21기 담당이사, 주책임자) - 주 의</li> <li>○ 공인회계사 OOO [과실 IV→V]<sup>*3</sup> (제21기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 - 주 의</li> </ul>

\*1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낮아, '현행 양정기준'을 적용

\*2 동기판단(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판단)

가. 대여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과실

-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에 미달(2.42배)”하는 등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실’로 판단 [新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가. 및 나.]

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과실

-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에 해당하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에 미달(0.54배)”하여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실’로 판단 [新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가. 및 나.]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 :

- 기본조치의 가중 : 해당사항 없음

- 기본조치의 감경 : 공인회계사 000는 보조책임자로서,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1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하므로 1단계 감경[新 심사·감리 결과 조치양정기준 VII.2.]

#### \*4 조치근거

- 00회계법인 : 「舊 외부감사법」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舊 외감규정」 제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 제1항
- 공인회계사 : 「舊 외부감사법」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舊 외감규정」 제54조(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제1항

## 4. 참고사항

가. 제5차 감리위원회 심의필(2021. 4. 15.)

나. 관계법규(붙임)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별지1)

## 씨앤티85(주)[舊 (주)포스링크] 등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씨앤티85(주)[舊 (주)포스링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씨앤티85(주)[舊 (주)포스링크]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 000 000 000 000 00 0000

☐ 000[씨앤티85(주)[舊 (주)포스링크]의 前 대표이사]

- 생년월일 : 0000. 0. 00.
- 주소 : 000 000 000 0000 000, 000000

### 2. 조치내용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 씨앤티85(주)[舊 (주)포스링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발행을 조치일로부터 6개월간 제한\*한다.

\*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사모발행 (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前 대표이사 000에 과징금 10,000,000원을 부과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씨앤티85(주)[舊 (주)포스팅크]에 과태료 37,500,000원을 부과한다.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 제16조 제2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규정 등에 의하여,
  - 씨앤티85(주)[舊 (주)포스팅크]는 2022회계연도(2022.1.1.~2022.12.31.) 및 2023회계연도(2023.1.1.~2023.12.31.)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씨앤티85(주)[舊 (주)포스팅크]는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적사항을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 3. 조치이유

#### 가. 지적사항

- 씨앤티85(주)[舊 (주)포스팅크](이하 '회사')는 제20기(2015.1.1.~2015.12.31.)부터 제22기 3분기(2017.1.1.~2017.9.30.)까지의 연결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제20기 : 연결 및 별도)
    - 회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15.11.17.~'15.12.17. 기간 중 3회에 걸쳐 (주)OOOO의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모터보트 등을 1,077백만원에 매입한 후,
    - '15.12.15.~'15.12.24. 기간 중 3회에 걸쳐 이를 다시 (주)OOOO에게 1,484백만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1,484백만원 및 1,077백만원 허위계상한 사실이 있음
  -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제21기 및 제22기 1분기 : 개별, 제22기 반기 및 3분기 : 연결 및 별도)
    - 회사는 前 대주주 등이 회사 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금액(대여금 1,500백만원, 매도가능증권 250백만원) 중에서, 회수불가능 또는 손상이 필요한 금액[(주)OOOOOOO 대여금 600백만원, (주)OOOOOOOOO 매도가능증권 250백만원]에 대하여,
    -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600백만원 과소계상하고, 매도가능증권을 250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제21기 : 개별)

- 회사는 (주)OOOOOOO 등에 대한 대여금 담보로 前 대주주(OOO)로부터 회사 보통주식 194,353주(담보설정 당시 시가 674백만원)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 회사는 '17.10.12.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20기, 제21기 및 제22기 반기 연결재무제표 등을 사용함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내용

(단위 : 백만원)

신고서 제출일	공시서류	모집증권	모집금액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2017.10.12.	증권신고서 (지분증권)	기명식 보통주	24,102	제20기, 제21기 및 제22기 반기 연결재무제표 등

○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 회사는 '16.12.30. 제출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20기 재무제표를 사용함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내용

(단위 : 백만원)

공시일자	공시서류	모집증권	모집금액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2016.12.30.	소액공모 공시서류 (지분증권)	기명식 보통주	999	제20기 재무제표

## 나. 근거법규

###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 제2항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
  1. 1년 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3. 3년 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경고 또는 주의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약속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 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제2019-13호)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름.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59조, 제160조, 제164조, 제426조, 제429조 및 제43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 제170조, 175조, 379조 및 제387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별표 제2호 및 제3호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여부 등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함
  - 상장법인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449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
- 소액공모 공시서류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
-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함.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함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문단 14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하여야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1
-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공시하여야 함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문단 58 등
-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각각 문단 63, 66 및 67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함

(별지2)

##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OO 회계법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OO회계법인 [제20기 감사인]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00 000 000 000 00, 00 0000

☐ 000 [제20기 담당이사, 주책임자겸 계정담당자]

- 생년월일 : 0000. 00. 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00
- 주소 : 000 000 000 000 000 00000 0000 0000

### 2. 조치내용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제27조, 부칙(제2019-13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 OO회계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항, 제27조, 부칙(제2019-13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 공인회계사 000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3. 조치이유

#### 가. 지적사항

- OO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은 씨앤티85(주)[舊 (주)포스팅크](이하 '회사')의 제20기('15.1.1.~'15.12.31.)의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제20기 : 연결 및 별도)

- 감사인은 회사가 (주)OOOO 및 그 특수관계자 등과의 모터보트 등 가공 거래를 통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1,484백만원 및 1,077백만원 허위계상 하였음에도,
-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이상거래에 대한 분석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간 특수관계 해당여부 확인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하고, 경고나 주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별표 2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 경고 또는 주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2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2년이내의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주권상장법인 및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조치등의 가중·감경을 별표 7에 따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별표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제2019-13호)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르되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

□ 「회계감사기준」 200, 240, 330, 500, 700

-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키는 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평가된 위험을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오류의 발견에는 효과적일 수 있는 감사절차가 부정의 발견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할 책임이 있음



-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의 평가된 위험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응하는 후속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후속 감사절차를 설계할 때 위험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함

(별지3)

##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OO 회계법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OO회계법인 [제21기 감사인]

- 대표이사 : 000, 000,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00 000 0000 000

☐ 000 [제21기 주책임자, 담당이사]

- 생년월일 : 0000. 0. 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00
- 주소 : 00000 000 0000 00, 00000 00000

☐ 000 [제21기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

- 생년월일 : 0000. 0. 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
- 주소 : 00000 000 0000 000 000 00000 00 0000

### 2. 조치내용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제27조, 부칙(제2019-13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 OO회계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나. 근거법규

###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하고, 경고나 주의를 할 수 있음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별표 2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 경고 또는 주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2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20시간 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2년이내의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주권상장법인 및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조치등의 가중·감경을 별표 7에 따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별표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제2019-13호)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르되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

□ 「회계감사기준」 200, 240, 330, 500, 700

-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키는 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평가된 위험을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오류의 발견에는 효과적일 수 있는 감사절차가 부정의 발견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할 책임이 있음
-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의 평가된 위험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응하는 후속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후속 감사절차를 설계할 때 위험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함

(붙임)

## 관 계 법 규

###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경우에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1.~2. <생략>

3.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제외한다.

**제5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② <삭제>

③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삭 제>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6조(감사인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4. <생 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상법」 제401조의2 및 제408조의2에 규정된 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5. <생 략>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3. <생 략>

4.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주권상장법인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⑦ <생략>

[별표1] 감사인에 대한 조치사유(제29조제3항 관련)

1.~6. <생략>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8.~20. <생략>

##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4조제9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회사.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심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는지 여부를 법 제15조의2에 다른 방법으로 행한다

③ <생 략>

**제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 위임 등)**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등에 관한 사항
2. 법·이 영 또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5. <생 략>

③~⑦ <생 략>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심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가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심사하는 업무

2.~14. <생 략>

15.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리 또는 평가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감사인 감리등"이라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나. 금융감독원장의 감사인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감사인

16.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회사 감리등"이라 한다)

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다. 금융감독원장의 회사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회사

17.~21. <생 략>

2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⑥ <생 략>

⑦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 ①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리(이하 "감사보고서 감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금융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3. 검찰등 국가기관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적시하여 조사를 의뢰한 경우

4. 회사관계자·감사관계자·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

② <생 략>

③ 증선위는 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산재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 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 회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조사)** ① 증선위는 감리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질문서·문답서 등에 의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3. <생 략>

② 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에 의한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52조(감리결과등의 처리)** ① 증선위위원장은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 등 법 위반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 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 략>
2. <삭 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 제한
4. 영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감사인의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③ <삭 제>

**제54조(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 략>
2.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 제한
4.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고, 당해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담당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하여 (감사반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년 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3. 3년 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경고 또는 주의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  
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생 략>

**제56조(고발등)** ① 증선위는 감리결과 고의로 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증선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정황으로 보아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7조(조치기준)** 증선위가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크기 등 중요도, 고의성의 유무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조치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때에는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조치의 가감 및 병과등)** ①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가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 포함) 조치를 받고,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② 제53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2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증선위는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질적 특성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⑤~⑥ <삭 제>

**제60조(사전통지)** ① 증선위(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부과의 조치인 경우에는 금융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당사자등(조치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회사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의 경우에는 그 임원, 관계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치의 제목
2. 조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제60조의2(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증선위가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증선위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②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당사자등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조치의 수준,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감사인이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를 한도로 한다)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2년 이내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공인회계사가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나. 주권상장법인

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사를 담당했던 이사를 주책임자로 하고, 주책임자의 감사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이 조에서 "담당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별하여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책임자에 법 제29조제4항제1호 또는 1년 이상의 전부 직무정지를 내리는 경우: 해당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2. 주책임자에 법 제2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 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공인회계사
-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감리 또는 감사인 감리를 한 결과 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하 이 조에서 “벌칙부과 대상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 정황으로 보아 벌칙부과 대상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③ 금융감독원장은 재무제표 심사(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한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조사자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에 대한 수정공시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1. 경고
  2. 주의
  3.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취약사항의 해소 등 위법상태를 시정하거나 다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
- ④ 금융감독원장은 별표 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양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 ⑦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리집행기관은 피조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조사자가 사망한 경우

2. 회사가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조치등 대상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3. 회사가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조치등이 불가능한 경우
4.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적인 법령등 위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 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되는 경우

**제31조(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등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③ <생략>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등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8조(위법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 및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치등의 일시
2.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조치등의 내용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14. <생 략>

**부칙 <제2019-13호, 2019. 4. 3.>**

**제2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별표 7] 조치등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위반동기**

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란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피조사자가 고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 및 임직원

- 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나) 회계장부, 전표(傳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다)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1)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 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 (2)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 (3)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되는 경우
  - (4)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없거나,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 마)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2)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 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共謀)하여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경우
  - 나)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다)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 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중과실(重過失)이 있다고 본다.
- 1)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 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2)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 나)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2. 위법행위의 중요도

- 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등급은 중요성 금액 대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판단한다.
- 나. 중요성 금액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요성 금액을 정한다.
  - 1) 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그 밖의 재무성과
  - 2)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 3. 조치등의 가중·감경

### 가. 가중사유

- 1)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 3)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를 받은 경우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4)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 5)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6)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 7)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감경사유

-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단,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 2) 감사인 감리 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회사 또는 감사인이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고지한 경우
- 5)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전(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지한 날 이전)에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 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
- 6)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한 경우. 다만, 수정공시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감리집행기관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 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
- 7)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총장예의 고발등, 금융위원회예의 등록취소·전부 직무정지가 건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9)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조치등의 병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집행기관은 2개 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5. 회계처리기준 위반 외 법령등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위반행위의 원인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치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13.3.11. 시행)

**제25조(감리결과의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규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2(조치안 작성)**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선위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제25조의3(사전통지)**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25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피조치자의 진술거부 의사 표명·피조치자의 행방불명 등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③ 증선위 조치안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선위 개최 전에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 [별표 2]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 I.~II. <생 략>

### III.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

#### 1. 고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게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이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회사 및 임직원 해당사유

- 1) 실재성이 없는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 표시하는 등 회계적 사실이나 기록을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시킨 경우 또는 회계장부, 전표, 전산자료 또는 중요 문서·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2) 위법행위가 비자금 조성, 임직원등(대주주, 이사, 사실상의 임원 및 당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직원을 말한다)의 횡령·배임, 기타 불법자금세탁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 3) 공인회계사가 요구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변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감사를 방해한 경우
- 4) 위법행위가 특수관계자(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에 정의된 자)와의 비정상적 거래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 5) 위법행위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또는 채무감면 등에 따른 이행조건 또는 계약조건 등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6)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되거나, 상장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7) 기타 관련 법규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한 경우

나. <생 략>

## 2. <생 략>

### 3. 과실

전문가로서의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가. <생 략>

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해당사유

- 1) 양적 및 질적 중요성 등을 고려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계정과목에 대한 감사업무와 관련된 경우
- 2)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감사절차는 대부분 취하였으나 회사의 특성을 감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적용한 감사절차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법행위를 발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3) 회사에 대하여 과실사유 가.1) 또는 가.2)를 적용한 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 4)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일부의 감사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였으나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

## IV.~V. <생 략>

## VI.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 1. 기본조치 가중·감경의 일반원칙

가.~다. <생 략>

### 2. 기본조치의 가중사유

가. <생 략>

나.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 1) 증선위에 의해 지정된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 2)~5) <생 략>

### 3. <생 략>



## VII. <생 략>

###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16.7.18. 시행)

- 제25조(감리결과와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규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2(조치안 작성)**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선위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 제25조의3(사전통지)**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25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피조치자의 진술거부의사 표명·피조치자의 행방불명 등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 ③ 증선위 조치안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선위 개최 전에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 [별표 2]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 I.~II. <생 략>

#### III.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

##### 1. 고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게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이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사 및 임직원 해당사유

- 1) 실재성이 없는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 표시하는 등 회계적 사실이나 기록을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시킨 경우 또는 회계장부, 전표, 전산자료 또는 중요 문서·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2) 위법행위가 비자금 조성, 임직원등(대주주, 이사, 사실상의 임원 및 당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직원을 말한다)의 횡령·배임, 기타 불법자금세탁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 3) 공인회계사가 요구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변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감사를 방해한 경우
- 4) 위법행위가 특수관계자(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에 정의된 자)와의 비정상적 거래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 5) 위법행위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또는 채무감면 등에 따른 이행조건 또는 계약조건 등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6)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되거나, 상장폐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7) 기타 관련 법규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한 경우

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해당사유

- 1)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법사실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하여 회사로 하여금 기업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반하는 재무제표를 작성케 하는 경우
- 2) 기타 관련 법규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한 경우

2. <생 략>

3. 과실

전문가로서의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가. <생 략>

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해당사유

- 1) 양적 및 질적 중요성 등을 고려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계정과목에 대한 감사업무와 관련된 경우
- 2)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감사절차는 대부분 취하였으나 회사의 특성을 감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적용한 감사절차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법행위를 발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3) 회사에 대하여 과실사유 가.1) 또는 가.2)를 적용한 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 4)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일부의 감사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였으나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

IV.~V. <생 략>

VI.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1. 기본조치 가중·감경의 일반원칙

가. ~다. <생 략>

## 2. 기본조치의 가중사유

가. <생 략>

나.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 1) 증선위에 의해 지정된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 2) ~5) <생 략>

## 3. <생 략>

## VII. 공인회계사의 책임구분

### 1. 일반원칙

가. ~마. <생 략>

### 2. 보조책임자에 대한 조치

보조책임자는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한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감정시 최소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책임자와 동일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 VIII. <생 략>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심사, 감리결과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심사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조치안 작성)** 제38조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 (별표 제1호)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제40조(사전통지)**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의 경우)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④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 I.~II. <생략>

### III.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

#### 1. 고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피조사자가 고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회사 및 임직원

- 1)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2) 회계장부, 전표(傳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3)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나)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다)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되는 경우

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자본시장법」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없거나,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마)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1)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共謀)하여 회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경우

2)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2.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과실(重過失)에 의한 위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으나, 피조사자가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2)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3)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나.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2)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3)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IV.~V. <생 략>

VI.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1. 기본조치 가중·감경의 일반원칙

가.~다. <생 략>

2. 기본조치의 가중사유

가.~나. <생 략>

3. 기본조치의 감경사유

가.~나. <생 략>

## VII. 공인회계사의 책임구분

### 1. 일반원칙

가.~마. <생 략>

### 2. 보조책임자에 대한 조치

보조책임자는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한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감경시 최소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책임자와 동일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 VIII. <생 략>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② ~ ④ <생 략>

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6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증권의 발행·모집·매출,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생 략>
2.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 3.~5. <생 략>
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3의2. <생 략>
4. 재무에 관한 사항
5. <생 략>
- ③~⑦ <생 략>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④ <생 략>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⑧ <생 략>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 <생 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 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 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 제>

-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③ <생 략>
-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12. <삭 제>
- 13.~35. <생 략>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37.~49. <생 략>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집합 투자증권 및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생 략>
3. 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 가.~나. <생 략>
- 다. 재무에 관한 사항
-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 마.~자. <생 략>

②~④ <생 략>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① 법 제1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전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하며,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 경우 해당 서류(집합투자증권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거나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할 것. 이 경우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하여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5. <생 략>

②~⑤ <생 략>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② <생 략>

③ 법 제1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④~⑥ <생 략>

**제170조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8조제1항부터 제4항(제4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만 해당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8조제2항제7호 중 부속명세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 5. 경고 또는 주의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34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19의2와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내용을 계량적 위반사항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하며, 그 위반의 정도는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 1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내용을 법 제178조의2 제1항의 행위와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로 구분하며, 그 위반의 정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가.~라. <생략>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가.~다. <생략>

3.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라. <생략>

③~⑥ <생략>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다. <생략>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④ <생략>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舊 과태료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투. 법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 제36호	5,000만원

**[별표22] 과태료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푸. 법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 제36호	6,000만원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5. <생략>

②~③ <생략>

**제19조(조사결과 처리)**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42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또는 법 제42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금융위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도 이와 같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④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26조(과태료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4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③ 금융위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 1.~3. <생략>

부칙 <제2020-4호, 2020. 1. 16.>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가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 2. 통칙

가. 이 규정에서 '법정최고액'이란 이 기준 3.에서 규정하는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의 상한을 곱한 금액(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 다만, 법 제429조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나. <생 략>

다. 법 제429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 이사 또는 당해 법인과 이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로 본다.

라.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 제3항의 위반사실이 재무제표 본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마. 이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바. 상기 라. 및 마.에 불구하고, 법 제4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의한 것으로서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을 부과(공인회계사 및 그 소속단체는 제외)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동일 사업연도 중 2 이상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정기보고서별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 6. 최저부과액

위반행위가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다만, 법 제429조 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최종 위반시로부터 2년 이내에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거나 법 제429조의2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3회이상 발생한 경우

## 7. 법 제429조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 관련 신고자외의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 산정

가. 법 제429조제1항 위반이 있는 경우의 신고자 외의 자

- (1) 증권신고서의 제출 또는 미제출 당시의 당해 법인의 이사(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발기인)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당해 신고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과 5천만원에 이 기준 7.의 라.에서 규정하는 부과율을 곱한 금액(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천만원),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의 100분의 30과 2천만원에 이 기준 7.의 라.에서 규정하는 부과율을 곱한 금액(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나. <생 략>

다. 위의 신고자외의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은 이 기준 2.라.에 불구하고 '당해 신고자의 증권신고서 위반 및 공개매수신고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기본과징금에 의하여 산정된 부과과징금'으로 적용한다.

##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2의2 과태료 부과기준」

###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별 법정최고금액(같은 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생 략>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산정한다.

###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 4. 최종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차감한 비율을 예정금액에 적용하며,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한다.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재무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을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 및 회계에 관한 용어는 외감법 제13조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국내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 ⑫ <생략>

**제2-1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① 법 제130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이하 “소액공모”라 한다)을 하는 자가 영 제137조 제1항제1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에 미리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② ~ ④ <생략>

##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3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공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시의무자에게 다른 조치에 우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1) 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치양정 기준은 (4)에 따른다.

(1) ~ (2) <생략>

(3) 제척기간이 경과하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

(4) <생략>

나.~다. <생략>

라. 위법행위의 내용이 재무제표의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위 3.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따른 조치기준에 의한다.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④~⑥ <생 략>

부칙 <제2017-38호, 2017. 10. 19.>

제2조(과태료 등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 <별표3> 舊 과태료 부과기준

1. <생 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생 략>

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다.~마. <생 략>

3. 예정금액의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단순법규 위반 등을 의미

4.~6. <생 략>

\*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1. <생 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 나. <생 략>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 (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 바. <생 략>

###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 다. <생 략>

### 4. ~ 6. <생 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15.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14.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 (2)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 (3)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4)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 (5)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2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공시하는 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7) <생 략>
  - (8)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58.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은 각각 문단 63, 66 및 67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63.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한다.

67.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당해 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 회계감사기준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15.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키는 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17.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 회계감사기준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8.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을 때,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 가능성을 고려하고, 오류의 발견에는 효과적일 수 있는 감사절차가 부정의 발견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은 감사인이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그러한 왜곡표시를 발견할 수 있는 절차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27. 감사인은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평가된 위험을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따라서, 아직 수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기업의 통제활동 등 그러한 위험에 관련된 통제를 이해하여야 한다.
28.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의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평가된 위험에 대하여,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전반적인 대응을 결정하여야 한다.
47. 감사인은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해당 감사업무의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 결론을 내린 경우,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를 감사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 회계감사기준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6.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의 평가된 위험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응하는 후속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7. 감사인은 수행될 후속감사절차를 설계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b) 감사인은 위험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19 참조).

**A19.** 감사인이 위험을 높게 평가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때는, 감사증거의 양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또는 제3자로부터 입수하는 증거에 보다 중점을 두거나 다수의 독립적인 원천으로부터 보강증거를 입수함으로써 보다 관련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

## □ 회계감사기준 500. 감사증거

4.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A2.** 감사인이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업무는 대부분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에는 질문 외에 조사, 관찰, 확인요청, 재계산, 재수행 및 분석적절차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들이 결합된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질문은 중요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왜곡표시의 증거까지도 생성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질문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 또는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 A18.** 외부확인 은 문서나 전자 형태 또는 기타 형태의 매체에 의해, 제3자(확인당사자)가 감사인에게 직접 회신함으로써 감사인에게 입수되는 감사증거를 나타낸다. 외부 확인절차는 일반적으로 특정 계정잔액 및 그 구성요소와 관련된 경영진주장을 다룰 때 유용하다. 그러나 외부확인이 계정잔액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어떤 기업이 제3자와 맺은 계약이나 거래조건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동 확인요청은 계약에 어떤 수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정이 있다면 관련 세부사항은 무엇인지 묻기 위해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외부확인 절차는 예를 들어 수익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면계약”이 없다는 것과 같이,

특정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이하 생략)

7.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도움으로 작성되었다면, 감사인은 감사목적에 필요한 정도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유의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을 평가함.
  - (b)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함.
  - (c)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함.
9. 감사인은 기업이 생산한 정보를 이용할 때, 해당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상황의 필요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 (b)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명확하고 자세한지 여부를 평가함.

## □ 회계감사기준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7. 이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 적정의견 -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에 표명되는 의견

### <감사의견>

35. 감사인은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할 때, 법규에서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의 문구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 (a) 재무제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 (b) 재무제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회계심사국
연 락 처	02-2100-2695	02-3145-7720